

북구의회 해외연수 파문...행안부 진상조사 착수

SOCIETY

2025년 9월 8일 월요일

온누리상품권 할인차액금 유용 정황...경찰 내사

정치권·시민들 “용도 외 사용 시도 자체가 범죄”

공무국외출장 시 여행사 대금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결제해 할인차액금을 유용하려 했던 광주 북구의회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지역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도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제발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7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 7월 북구의회가 진행한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 유선상 질의가 걸려

왔다. 행안부 측은 예산 집행의 절차, 적절성 여부를 비롯해 반납 여부 등 해당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은 북구의회 12명의 구의원과 3명의 직원이 일본 도쿄 출장을 다녀온 것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당시 이들은 정액으로 받은 출장비

4400여만원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여행사 대금으로 결제한 뒤 할인받은 10% 차액금을 즉시 반납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해 발생한 할인 차액이 공적 예산에서 발생한 이익임에도 이를 개인적으로 활용(기부)하려다 출장을 다녀온 지 2개월이 지나서야 반납했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온누리상품권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업무에 비취볼 때 배임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나아가 공무국외출장이라는 특정 목적

을 위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부당한 이익을 실제로 사용하려다 반납한 만큼 업무상 횡령 미수 등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북구의회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공무국외출장 절차에 대해 전반적으로 문의했고,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음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진보당 광주 북구을지역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지역위는 “공무국외출장 예산을 용도 외로 사용하려 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는 위법”이라며 “온누리상품권의 환급액 역시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세

금인 만큼 2개월이나 지나 반납한 것은 비리 혐의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들도 이러한 북구의회의 공무국외출장 행태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북구에 거주 중인 한 시민은 “기부는 개인 돈으로 해야 한다. 어떻게 예산을 본인들 마음대로 기부하려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할인 차액금을 기부하려고 한 행의 자체가 사적 유용이고 범죄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의회는 지난 5일 온누리상품권으로 일본 도쿄 출장을 다녀온 것과 관련해 “공적 자금의 절감과 투명한 집행을 위한 노력한 사례”라며 해명자료를 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 ‘119 안심콜’ 가입률 1.90%...평균 이하

2만6505명 등록...전남 4.33% ‘전국 최고’

광주 지역 119안심콜 가입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119안심콜 서비스 가입자수 및 비율’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광주 전체 139만8538명 중 2만6505명이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 가입률은 1.90%를 기록, 전국 평균(1.99%)에도 미치지 못했다. 119안심콜 서비스는 위급상황 발생 시 사전에 등록된 요구호자의 병력과 보호자 정보를 확인해 신속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을 지원하는 대국민 서비스로 지난 2008년 도입됐다. 그러나 서비스가 도입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가입률이 1%대에 머무른 탓에 해당 서비스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반면 전남의 경우 178만2183명 중 7만7093명이 가입, 전국에서 가장 높은

4.33%를 기록했다. 전국 119안심콜 누적 가입자는 전체 인구 5115만명 중 102만3138명이었다. 전체 국민 50명 중 1명만 가입한 셈이다. 지역별로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를 포함해 울산(1.17%), 인천(1.48%), 경기(1.53%), 대전(1.59%), 부산(1.67%), 세종(1.77%) 등 8개 지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전국 가입자의 서비스 이용 현황 역시 저조했다. 2020년 31만1702건에서 2024년 52만499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119구급차 전체 출동 건수(332만4287건) 대비 이용률은 15.79%에 그쳤다. 한병도 의원은 “의료 취약계층에게는 119안심콜이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 역할을 하는 만큼 가입률 증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

‘환자 알선 성과급’ 한의사·병원 직원들 벌금형

입원 환자를 알선하는 대가로 성과금을 주고받은 한의사와 병원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50)와 병원 부장급 직원 B씨(48)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병원 직원 6명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44만원~4655만원을 명령했다.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교통사고 부상자 등 병원 입원 환자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성과급 명목 총 3억2372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자 직원들에게 입원 환자 등을 알선하도록 했다. 병원은 환자를 데려온 직원에게 환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의 5~10%를 성과금으로 지급했다. 많은 환자를 유치한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의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금으로 줬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4000만원 상당이다. 특히 교통사고 환자를 받고자 운수업체 기사들을 상대로 영업을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 임영진 기자 looks@



충장로에 열린 ‘도깨비 장터’ 6일 광주 동구 충장로4가 일원(옛 조흥은행 사거리)에서 열린 ‘RE:VERSE 도깨비장터 IN 충장로’를 찾은 입객 동구청장과 시민들이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전남 마약류 적발량·금액 ‘폭증세’

지난해 대비 중량 4배·금액 17배 늘어...특단대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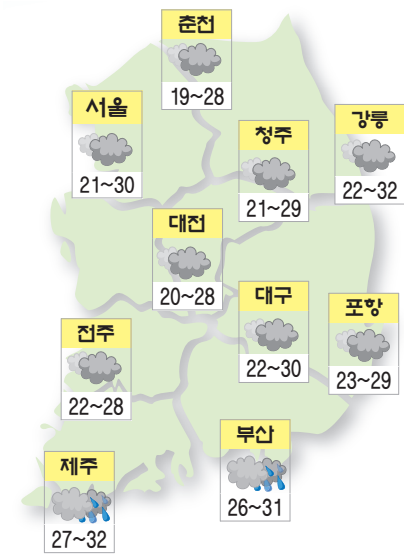
올해 광주본부세관에서 적발한 마약류 중량과 금액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광주본부세관의 마약류 적발 건수는 33건이다. 적발된 마약 중량은 2만1859g, 금액은 17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적발 건수 44건, 5719g, 1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중량은 4배, 금액은 17배 폭증한 수준이다. 전국적으로는 세관 마약류 적발 중량이 최근 3년 새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국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은 총 787kg, 866억원 규모였으나, 올해 7월 기준 이미 2736kg, 금액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7개월여만에 이미 지난해 물량의 3배, 금액은 12배 넘게 폭증한 것이다. 세관별로는 서울본부세관은 2024년 총 37kg, 18억원 규모에서 2025년은 1~7월 1695kg, 8453억원으로 치솟으며 지난해 전체에 비해 40배 폭증했다. 부산본부세관도 같은 기간을 비교해 64kg, 141억원에서 650kg, 2145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마약류 품목별로는 코카인이 전체 증가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기준 코카인이 2302kg으로 전체 물량의 84%를 차지했으며, 금액으로는 1조604억원으로 전체의 97%에 달했다. 중남미 코카인 생산 증가와 부산신항 물동량, 미·유럽 국경 단속 강화로 국제 마약조직이 동아시아를 새 판로로 삼으며 선박을 통한 대규모 밀반입이 세관에 적발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이인선 의원은 “반년 만에 1조원이 넘는 마약이 적발됐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마약 공화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 신호다”며 “정부와 관세청은 해외 밀반입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국내 유통망을 뿌리째 끊어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예보 06:10 달출 19:07
☁️예보 18:50 달진 06:22



광주	23~29
목포	24~29
여수	25~29
순천	24~30
구례	23~30
광주	23~30
해남	23~30
임도	24~30
흑산도	25~29
고흥	23~31
진도	23~30

목포	밀물(고)	02:30 / 14:39
	썰물(저)	07:47 / 19:57
여수	밀물(고)	09:19 / 21:45
	썰물(저)	03:13 / 15:17

보조금 타려고 하원 시간 조작

만년필 ○...보육 아동의 하원 시간을 허위로 작성하고 보조금 수천만원을 타낸 어린이집 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아.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46·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광주 서구에서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영유아보육 관련 국가·지방보조금 3704만원을 행간 혐의로 기소. A씨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보육 아동이 한 시간 늦게 하원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했다고. 임영진 기자 looks@

전직 대통령 이름이 뭐길래...광주교육감 선거 직함 논란

‘노무현 학교장’ 직함 놓고 출마 예정자들 여론조사 거부 선언

내년 6월3일 치러지는 광주시교육감 선거를 8개월여 앞두고 특정 출마예정자의 직함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김용태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2013~2014)이 전직 대통령 이름을 직함에 사용한 것에 대해 오경미 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과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2015~2018)에 이어 현직인 이정선 교육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지난 6월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여론조사를 강력히 거부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특정 후보가 ‘노무현 시민학교장’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정치적 상징

을 끌어다 쓰는 행위로, 이는 교육을 정치화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출마예정자 전체가 아닌 특정인 2명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여론조사도 다양성을 왜곡하고 시민의 판단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조사방식”이라며 “특정 후보 간 대결 구도가 아닌 모든 후보의 정책과 철학을 시민이 고르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신뢰성을 잃은 여론조사에는 어떤 경우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광주시교육감 선거 출마예정자로 거론되는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과 오경미 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도 공동성명을 내고 “교육과 무관한 정치적 인물의 이름을 여론조사용 경력에 사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도 “전직 대통령 이름 하나로 지지를 극단적으로 요동친다는 것은 교육감 선거가 교육 정책과 철학이 아니라 정치적 프레이밍과 유명 인사의 상징성에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교육에서 정치적 영향력은 단호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용태 출마예정자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제 직함은 실제로 제가 맡아왔던 공식 직함이며, 시민 사회와 교육 현장에서 널리 알려진 공식 이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검

증을 거친 유사 사례가 존재하고, 여론조사에서도 해당 직함이 공식적으로 사용된 사례가 있다”며 “이는 언론과 조사기관 모두가 해당 직함을 정당한 공식 이력으로 인정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의 경력을 문제 삼으며 여론조사를 보이콧하는 행위야말로 민주적 절차와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 광주시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에 대한 최근 5차례 여론조사에서 김용태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이 ‘노무현재단 광주 시민학교장’ 직함을 사용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지지율이 최고 21%, 최저 6%를 기록하며 1위와 4위를 오가자 여론조사 방식과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 의문이 제기됐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전남교육감 ‘비리 연루’ 가족 소유 한옥 거주 논란

교육감 측 “주택 소유자 이력 물랐다...즉시 이사할 것”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한옥 주택이 과거 납품 비리에 연루됐던 업체 대표의 배우자 소유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감 측은 계약 당시 몰랐던 비리 연루 사실을 최근야야 파악했다며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고 이사하겠다고 밝혔다. 7일 전교조 전남지부와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전남 무안군 도교육청 청사 인근 부지 381㎡ 규모 한옥을 임차해 거주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당선 후 교육감 관사를 없애겠다는 공약 이행을 위해 2023년 6월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05만원으로 임차 계약하고 현재까지 살고 있다. 임차한 한옥이 전남 교육계를 떠들썩

하게 했던 ‘암막 스크린 납품비리’에 연루된 업체 대표의 배우자 소유라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사건은 지난 2017~2018년 전남 학교 62곳에 영사용 스크린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달청 계약 조건보다 낮은 사양의 전동 암막을 설치하고 업체와 전현직 공무원들이 뇌물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로 처벌받았다. 교육감 측은 한옥 소유주와 친분이 없고, 비리 연루 사실도 최근야야 알게 됐다는 입장이다. 교육감 측 관계자는 “도교육청 가까운 곳의 단독주택 임대 물건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며 “임대인 가족이 납품 비리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된 만큼 조속히 다른 곳으로 이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